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6-3

(공개)

기업 · 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

2024. 3. 28.

관계부처 합동

기업·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(요약)

1 추진 방향

- 설비투자는 수출 호전 등으로 개선 흐름이나 관망심리 여전, 건설투자는 고금리 등으로 '23.4분기부터 둔화 흐름 가시화

→ 기업·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,
1차 투자대책 과제 점검·보완* + 2차 투자 프로젝트 추가 지원

* 추진상황 지속점검,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마련 등 실제 투자 연결시까지 밀착 지원

2 2차 투자 프로젝트

◇ 기업·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18개(약 47.2조원 규모) 정상 가동 지원

1. 투자 관련 규제 개선

- (**제주하원 테크노캠퍼스**) 기회발전특구 선정시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(우주산업 클러스터)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

* 제주도가 해당 과제를 규제 특례로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('24.上)

- (**청주화장품 공장**)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산단 지역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입주 허용

- (**울산페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등**)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「산업집적법」 개정 추진*

* (現) 산단 내 공장 완공 전의 미활용부지 임차 불가

→ (改) 동일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를 주차장·야적장 등 용도로 임차 허용

- (**전국셀프스토리지**) 공유창고를 도심지 내 적법하게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(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)

* 공유창고가 「건축법 시행령」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인지 분류가 모호하여, 일부 지자체는 공유창고를 창고시설로 판단하고 도심지 내 설치·운영 제재

2. 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

- ☐ **(서울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)**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(36개월+α → 27개월, △9개월+α)
 - *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검토(12개월+α → 9개월),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수시 개최(△2개월) 등
- ☐ **(포항수소환원제철 용지)**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신속 개최 등을 통해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여 사업 조기 추진 지원(△6개월+α)
- ☐ **(홍성내포신도시 종합병원)**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간 단축(3개월 → 40일 이내)
- ☐ **(단양체류형 관광시설)**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통해 재정·금융 지원*하고, 환경영향평가 우선심사(11개월 → 8개월) 및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
 - * 총사업비 20% 규모의 자펀드 조성, 대출 특례 보증 등
- ☐ **(송도K-바이오 랩허브)** 지자체 공정기간 추가 단축 등을 통해 최대 15개월 완공기한 단축* 및 완공전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
 - *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신속 이행(△10개월) + 지자체 공정기간 단축(△5개월)

3.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

- ☐ **(광양이차전지 클러스터)**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*
 - * 기업전용 회선 설치 근거 마련, 회선설치로 감소되는 필수녹지를 대체할 녹지 추가 지정
- ☐ **(울산장생포선(線) 부지)** 현재 운행이 중단된 철도부지 활용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폐지(~'24.下) 및 매각('25~) 추진
- ☐ **(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)** 산단 내 전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설치경로를 신속 변경*하고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
 - *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재포장 금지기간 등에 해당되어 계획된 기한('26.10월) 내 송전선로 설치 완료 불가 → 군산 우회경로로 신속 변경 추진
- ☐ **(구미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)** 구미산단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 지원('24.下 착공)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1차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	2
III. 추진 방향	4
IV. 2차 투자 프로젝트 내용	7
1. 투자 관련 규제 개선	7
2. 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	12
3.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	19
V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	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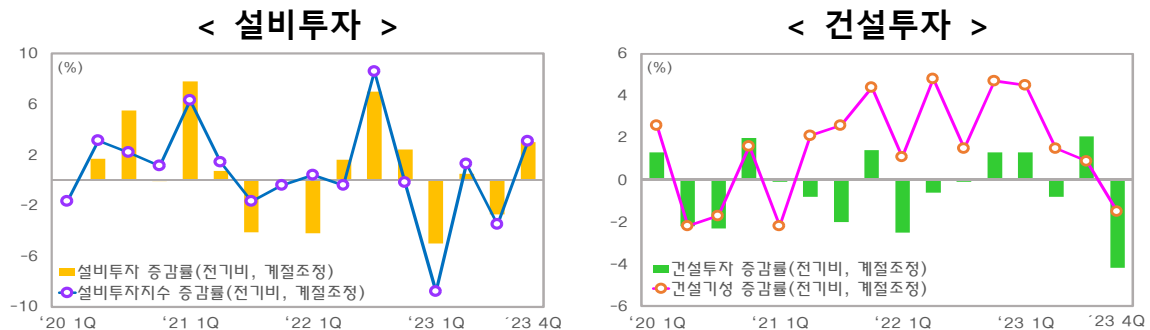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

□ (투자 동향) 설비투자는 수출 호전 등으로 개선 흐름이나 관망 심리 有, 건설투자는 고금리 등으로 '23.4분기부터 둔화 흐름 가시화

- (설비투자) 반도체 등 수출 호전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으나, 고금리, 관망 심리 등 불확실성 상존('23년: 0.5% → '24년 전망: 3.0%)
- (건설투자) 수주·착공 부진의 영향이 '23.4분기 가시화되었고, '24년에도 전반적으로 둔화 전망('23년: 1.3% → '24년 전망: △1.2%)

- 특히, 사업성 악화(고금리·건설비 상승)와 함께 PF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수요 냉각 → 시차를 두고 하반기 하방압력 가중 우려

* 신규수주CBSI: ('23.6)89.4 (7)90.9 (8)74.6 (9)71.4 (10)68.5 (11)83.2 (12)86.3 ('24.1)71.9 (2)77.7
 ** 건설수주 증가율(YoY): ('20) 1Q△1.0 2Q26.6 3Q37.4 4Q9.5 ('21) 1Q26.5 2Q18.7 3Q3.7 4Q△2.9
 ('22) 1Q13.2 2Q22.2 3Q30.5 4Q△17.4 ('23) 1Q△11.1 2Q△31.5 3Q△44.7 4Q18.9



□ (투자 활성화) 기업·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총력 지원 추진



- (투자 생태계 변화) 지역의 강점을 살린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 유치 노력 증가 → 기업·지역 주도의 선진 투자 생태계로 발전 중
 - 정부도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인센티브 확충과 애로 해소 등을 통해 투자의 물꼬를 트는 역할로 전환 필요
- (투자 현장의 목소리) 현장에서도 기업과 지자체 계획한 투자를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다수 건의
 - 입지·환경 등 규제 합리화와 행정절차 간소화·효율화, 전력망 등 투자 인프라 조성을 집중적으로 건의

➡ 범부처 원팀으로 기업과 지역의 투자 애로 해결을 총력 지원

Ⅱ. 1차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

-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(18개, 최대 46조원)의 신속한 가동 지원을 위한 「1차 투자 활성화 방안('23.11월)」을 마련, 밀착 관리 중

-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중심의 **맞춤형 투자 활성화 대책**(’23.11월)을 마련·추진 중(18개 프로젝트, 최대 46조원 투자)

정책 주요 내용	성과 및 기대효과
<p>◇ 규제개선, 행정절차 Fast Track, 분쟁 조정 등 맞춤형 지원</p> <div> <div> <p>투자여건 규제개선 22.9조원</p>  </div> <div> <p>▶ 전남 해상풍력 발전(약 9.2조원, '18~'30년) - 지방공기업 출자 완화(10% → 25%)</p> </div> </div> <div> <div> <p>행정절차 Fast track 14.1조원</p>  </div> <div> <p>▶ 하남 스피어(약 2조원, '25~'29년) - 사전 행정절차 단축(42개월 → 21개월)</p> </div> </div> <div> <div> <p>사업분쟁 조정·중재 8.8조원</p>  </div> <div> <p>▶ 고양 K-컬처밸리(약 1.3조원, '16~'26년) - 사업내용·기간 조정 협의 지원</p> </div> </div>	<p>➡ 최대 46조원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</p> 

- 既 발표 과제에 대한 밀착지원을 위해 기재부 내 프로젝트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제 투자로 연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
- 1차 대책을 통해 既 발표된 프로젝트 중 기업측 추가요청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·지원

〈참고〉 추가 보완 주요 프로젝트(예시)

- ▶ (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) 이차전지 기업입주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신속 변경 추진
 - (추가 애로) 이차전지 공장 신속한 착공을 위해 산단 계획 변경 완료 전 공장 용지 부지 평탄화 작업 추가 요청 → 첨단산업 클러스터 대책 통해 해결('24.2월)
- ▶ (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)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위한 대체부지(산단 외) 확보 곤란
 - 「산업집적법」 개정(~'24.8월) 통해 산단 내 부지 확보 지원
- ▶ (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) 공장의 일부 시설에 대해 개별 냉난방시설 사용 既허가('24.1월)했으나, 기업이 허가 대상 시설(예: 제품 검수 시설 등) 추가 요청
 - 기업-산업부-지역냉난방 사업자 간 협의 적극 지원하여 추가요청까지 허가 완료('24.3월)

- 정상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도 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
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·추가 지원방안 강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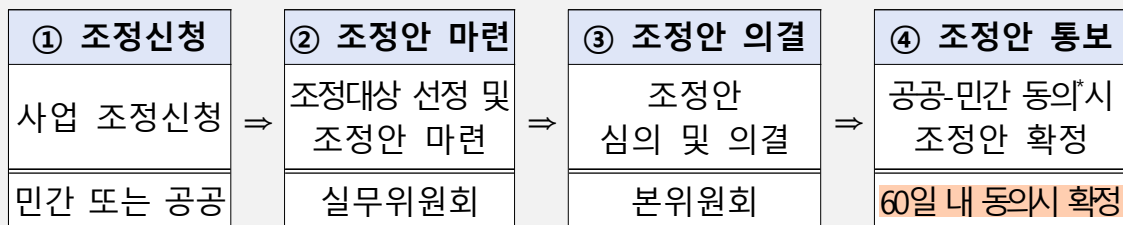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, **조정위원회**를 가동('23.9월)하여 **총 32건**(공공주택 26건, 기타 6건) 사업에 대해 **조정안 마련·협의중**

- 사업분쟁의 조정·중재를 위해 조정위원회 본격 가동('23.9월)으로 지체되고 있는 민·관 합동 사업의 정상화 적극 추진

[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]

* 근거 : 국토교통부장관 훈령

- **(구성)** 실무위원회(조정대상 선정, 조정안 마련) + 본위원회(조정안 의결)
 - **(실무위)** 토지정책관(위원장), 중앙·지자체위원(4명) 및 민간위원(10명) 등 **16명**
 - **(본위원회)** 1차관(위원장), 중앙·지자체위원(5명) 및 민간위원(12명) 등 **18명**
- **(절차)** 신청 → 대상선정 → 조정안 마련 → 통보 후 60일 내 동의시 확정



* 공공은 필요시 **60일** 기간 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시행 후 동의 가능

-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접수된 **36건**(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 포함) 중 **32건**에 대해 **조정안 마련**('23.12월)·당사자간 협의 개시

* 조정안 마련을 위해 100여회 이상 실무협의, 4차례 실무위원회 등 진행, 조정촉구를 위해 쏠 사업 담당자 대상 시리즈 간담회 진행('24.1.4일~24일)

- 다만,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, 공공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**‘감사원 사전컨설팅’**을 선행하고 사업을 재개할 예정

▶ **(K-컬처밸리 사업)** 경기도-C社 / 아레나 공연장 등, 약 3.2조원

- 협의 도출 과정에서 **다각도의 검토**가 필요하여 **감사원 사전컨설팅** 등을 거쳐 사업 재개방안을 **지속 논의중**

▶ **(민간참여 공공주택 26건)** LH, 지방도시공사-건설사 / 공공주택, 약 7조원

- 물가 급등으로 증가하는 공사비 부담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→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, 개별 사안별 구체적 조정안 마련·협의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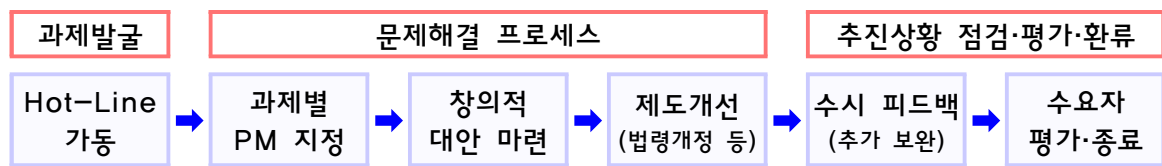
※ 그 외, 1차 대책에 포함된 **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**, **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**에 대한 조정의견 도출 → **민관 모두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후속조치 진행중**

Ⅲ. 추진 방향

□ (추진 경위)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→ 건의 수렴

- 기업·지역의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'23.11월 1차 투자 대책 발표 직후 2차 대책 마련 착수

- 지자체·경제단체·협회 등과의 투자 협력 플랫폼인 '투자 익스프레스'를 본격 가동('24.1월~)하여, 투자 애로과제 발굴



※ 권역별 찾아가는 지역 투자 설명회·간담회 7회 개최('24.1월)

□ (추진 방향) 기업·지역 프로젝트들의 신속한 가동 지원

➡ 1차 투자 대책('23.11월, 비경) 점검·보완 + 추가 애로 과제 발굴·지원

- (1차 대책 보완) '23.11.8일 발표한 1차 투자 대책 프로젝트*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추가 보완 방안 마련

* 규제 및 여건 개선, 행정절차 Fast Track, 민·관 사업 분쟁 조정 등 맞춤형 지원
→ 18개 프로젝트(투자 규모 최대 46조원) 정상 가동

- (2차 대책) 1차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속 지원

➡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,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18건 (투자규모 최대 47.2조원)의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애로 해소 추진

투자 관련 규제 개선	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	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
입지·환경 규제 혁신 + 투자 여건 개선 집중	민자 적격성 조사,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	송전선로 구축,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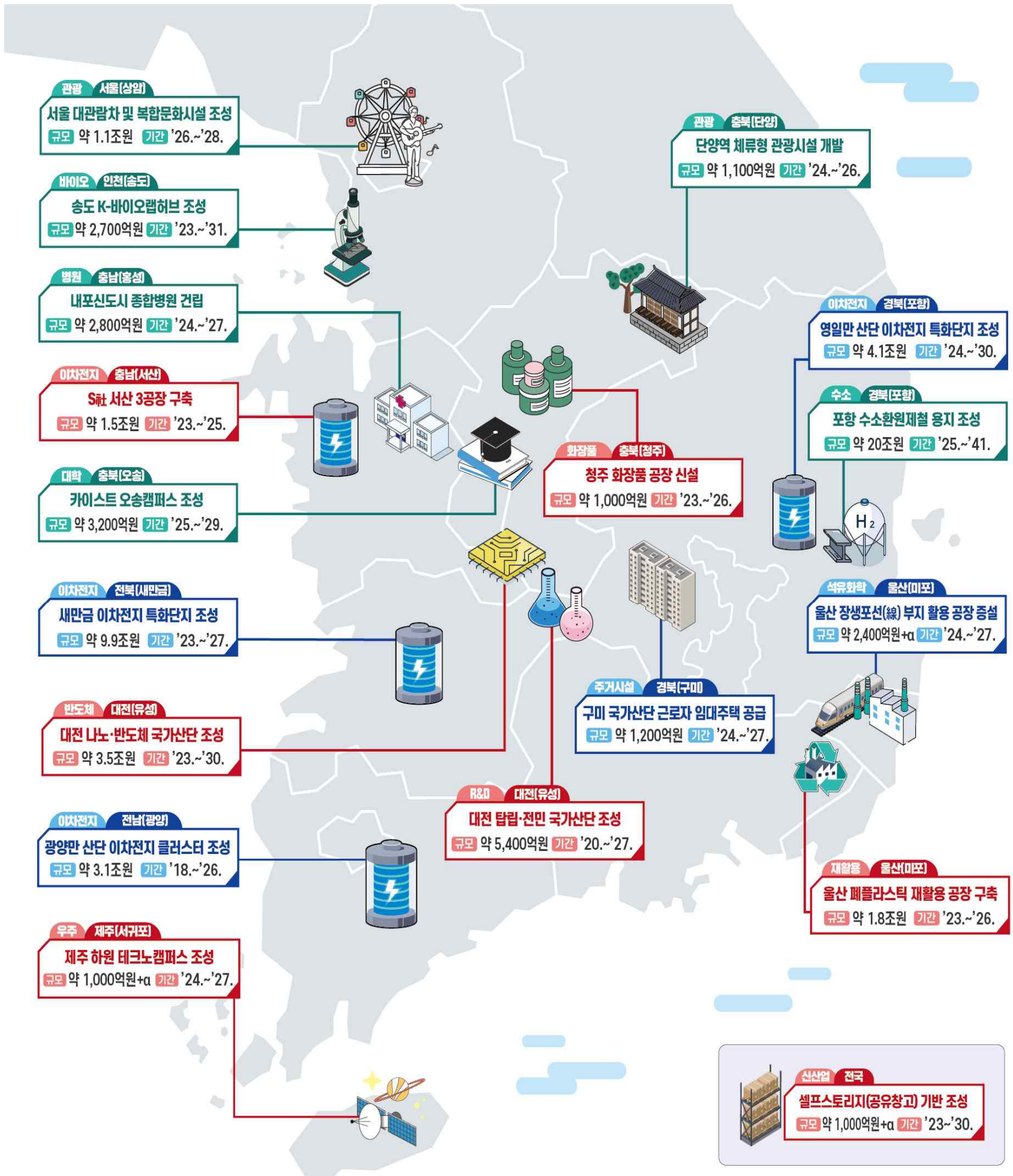
별첨 1

기업·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

◇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*을 통해 기업·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

➔ 18개 프로젝트, 최대 약 47.2조원 투자 규모

※ 애로 유형 : ①투자 관련 규제 개선, ②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, ③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



별첨 2

기업·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체계도

◇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·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18개(약 47.2조원) 정상 가동 지원

1 투자 관련 규제 개선	제주 서귀포	약 1,000억원+α	'24~'27	▶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(우주산업 클러스터) 조성 허용
	충북 청주	약 1,000억원	'23~'26	▶ 산단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입주 허용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 완화
	울산 미포	약 1.8조원	'23~'26	▶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·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건설업체 한시 입주 허용
	충남 서산	약 1.5조원	'23~'25	▶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·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	대전 유성	약 3.5조원	'23~'30	▶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(자기자본 부채비율) 상향 조정하여 지역투자 지원 - 광역도시개발공사 300% → 350% - 기초도시개발공사 200% → 230%
	대전 유성	약 5,400억원	'20~'27	▶ 공유창고의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·운영 위해 법령 개정* * 공유창고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화(건축법 시행령)
	전국	약 1,000억원+α	'23~'30	▶ 공유창고의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·운영 위해 법령 개정* * 공유창고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화(건축법 시행령)
2 행정 절차 Fast Track 추진	서울 상암	약 1.1조원	'26~'28	▶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(36개월+α → 27개월, △9개월+α) * 민자적격성 조사(△3개월+α) + 민간투자심의위 수시 개최심사(△2개월) 등
	충북 오송	약 3,200억원	'25~'29	▶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 추진하여 '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사업' 조기 착공 지원
	경북 포항	약 20조원	'25~'41	▶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신속 개최 등을 통해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여 사업 조기 추진 지원(당초 대비 △6개월+α)
	충남 홍성	약 2,800억원	'24~'27	▶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활용하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간 단축(약 3개월 → 40일 이내)
	충북 단양	약 1,100억원	'24~'26	▶ 지역관광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재정·금융 지원 + 환경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* *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(11개월 → 8개월 △3개월),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
	인천 송도	약 2,700억원	'23~'31	▶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랩허브 건축기간 단축(△15개월) +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
3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	전남 광양	약 3.1조원	'18~'26	▶ 산단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
	울산 미포	약 2,400억원+α	'24~'27	▶ 현재 열차 운행이 중단된 철도부지를 용도폐지·매각하여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 허용(10여개 기업)
	전북 새만금	약 9.9조원	'23~'27	▶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 신속 결정,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단 내 전력 적기 공급
	경북 포항	약 4.1조원	'24~'30	▶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하여 산업부·지자체·한전 협업을 바탕으로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 단축 추진
	경북 구미	약 1,200억원	'24~'27	▶ 우수 인재 주거시설 공급 등 구미산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지원

IV. 2차 투자 프로젝트 내용

1

투자 관련 규제 개선

◇ 입지·환경 규제 혁신 + 투자 여건 개선 집중

① (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)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용,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(우주산업 클러스터)을 조성

- ▶ (사업내용)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일반산업단지(우주산업 클러스터)로 신규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4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1,000억원+α(산단조성 비용 등)

- (현황)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(하원 테크노캠퍼스)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산단으로 지정·개발하고자 하나,
 - * H社, P社 등 입주 의향서 제출 완료 + 향후 40여개社 추가 입주 예상
 - 개발부지 면적(34만m²)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(1만m²)의 10배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 지정 곤란

〈참고〉 시·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방식

- ① 시·도별 「산업입지수급계획」(10년 단위)에서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면적 산정
- ②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범위 내에서 매년 「산업단지 지정계획」을 수립
 - * 신규산단 조성 허용면적 = 연평균 수요면적X10 - (①지정계획+②개발중+③미분양)
 - ↳ 단, 기업이 실수요 목적으로 직접 개발하거나, 중앙정부 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

- (추진방안) 기회발전특구*를 활용한 산단 조성 허용 추진
 - *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,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
 - 제주도→산업부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단 지정 허용'을 규제 특례*로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·지정 신청
 - *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「산업입지 수급계획」 적용 예외 사유로 적극 해석하여 산단 조성 허용(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예외 적용 신청)



* 단,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

- (기대효과) 1,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및 산단조성 투자 기대,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우주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

② (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)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산단 지역 내 화장품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(~'24.10월)

- ▶ (사업내용) 색조 화장품 생산규모 확대를 위해 청주 센트럴밸리 내 공장 신축
- ▶ (투자기간) '23~'26년 ▶ (투자규모) 약 1,000억원

○ (현황) 화장품 기업인 C社가 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나,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

- 입주 대상업종 추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관할 환경청 협의 필요*

* 현재 C社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 중으로,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장품 공장이 입주하려면 배출 제한 완화가 필요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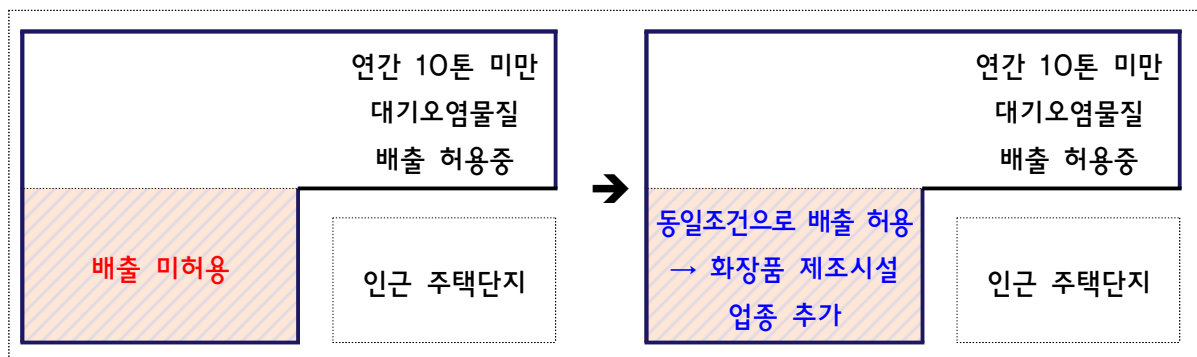
○ (추진방안) 청주시가 ①관할 환경청 협의를 신속히 추진(~'24.6월)하여 ②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(~'24.10월)

* 주택용지 북측에 인접한 공장 구역에서도 연간 10톤 미만 배출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,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 완화 추진

- ①금강유역환경청 인접 주택지역에 대한 대기질·악취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,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등 환경보전방안의 적정성 검토(~'24.6월)

- ②청주시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입주 허용(~'24.10월)

〈참고〉 청주 센트럴밸리 산단 기본계획 변경



○ (기대효과) 기업의 1,000억원 규모 공장 신설투자 집행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 창출 지원

**③,④ (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& S社 서산3공장(이차전지) 구축)
미활용되고 있는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·주차장 사용 허용**

〈 울산 미포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클러스터 구축 〉

- ▶ **(사업내용)**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유, PET 원료, 폴리프로필렌(PP) 생산시설 구축
- ▶ **(투자기간)** '23~'26년 ▶ **(투자규모)** 약 1.8조원

〈 서산 오토밸리산단 내 S社 이차전지 공장 증설 〉

- ▶ **(사업내용)** 이차전지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 공장 증설
- ▶ **(투자기간)** '23~'25년 ▶ **(투자규모)** 약 1.5조원

- **(현황)** 각 기업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이차전지 생산 공장 신·증설을 추진 중으로, 공사 중 자재 야적장과 주차장 공간 필요
 - ①울산·서산 모두 다른 기업에 분양된 인근 미활용부지가 있으나, 현행법상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 불가능
 - ②특히, 울산은 건설사가 부지를 직접 임차하고자 하나, 산단은 원칙적으로 건설 업체의 입주를 불허(임대도 불가)
- **(추진방안)** ①미활용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②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업체의 한시적 입주 허용
 - ①**산업부**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(「산업집적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, ~'24.6월)
 - ②**산업부** 법률 개정 후 산단 조성목적, 경제적 필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사기간 동안 각 공장 건설업체의 산단 입주 허용
- **(기대효과)** 1.8조원 규모의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구축(울산) 및 1.5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투자 지원(서산)

5, 6 (대전 나노·반도체 국가산단 & 탑립·전민 국가산단 조성) 산단 조성사업에
투자시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통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투자 지원

〈 대전 나노·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〉

- ▶ (사업내용) 반도체 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3~'30년 ▶ (투자규모) 약 3.5조원

〈 대전 탑립·전민 국가산단 조성 〉

- ▶ (사업내용) 탑립·전민지구에 주거·산업·연구시설 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0~'27년 ▶ (투자규모) 약 5,400억원

○ (현황) 대전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수요 대응을 위해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

- 다만, 해당 사업 투자기간 중 '26년부터 부채비율이 300% 초과가 예상* 되어 안정적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
→ 既계획중인 주요 투자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

*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 부채비율을 300% 이내로 준수하도록 규정(행정안전부, 「지방공사채 발행·운영기준」)

↳ 발행한도 비율: (도시개발) 300%, (도시철도) 100%, 130%(서울교통공사), (기타공사) 200%

○ (추진방안) 행안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할 경우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통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투자 지원(기준 개정·시행, '24.3월)

- 광역도시개발공사 300% → 350%, 기초도시개발공사 200% → 230%

○ (기대효과) 자금조달 여력 확보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지역 주요 개발사업 주도 가능

- 대전의 경우 약 4조원 직접 투자효과 +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난개발 문제 완화 및 지역 투자 기반 조성

7 (셀프스토리지 기반 조성) 도심지 내 셀프스토리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

- ▶ (사업내용)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투자
- ▶ (투자기간) '23~'30년 ▶ (투자규모) 약 1,000억원+α

○ (현황) 현행 「건축법 시행령」상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모호*하여 지자체별로 건축물 용도 해석이 상이

*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건축물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로 해석 가능

- 셀프스토리지를 건축법상 '근린생활시설'로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, 일부 지자체는 '창고시설'로 판단하여 건축물 용도 위반으로 단속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 곤란

〈참고〉 셀프스토리지 서비스



- (개요) 주로 도심지 건물 내 일정 공간·시설을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·관리
- (현황) S社, D社 등 다수 업체가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중('23.5월 기준 전국 총 300여개 지점)

○ (추진방안)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여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·운영 지원

- 국토부 현재 진행중인 규제 샌드박스* 사업 경과를 토대로 실증특례 종료 이전에 법령 개정 신속 착수** (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, '24.上~)

* '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' (ICT 규제 샌드박스, '23.9월~'25.9월)

** 실증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안전 등에 우려가 없는 경우 조기 개정 추진

○ (기대효과) 건축물 용도 규제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신산업 촉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·부가가치 창출 확대

- 관련 기업은 '30년까지 100호점 개점, 약 1,000억원 규모의 투자 기대

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

① (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)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(36개월+ α → 27개월)

- ▶ **(사업내용)**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,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
 - * 위치 :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/ 주시설: 대관람차, 복합문화시설 / 부속시설 : 짬라인, 분수쇼
- ▶ **(투자기간)** '26 ~ '28년
- ▶ **(투자규모)** 약 1.1조원
- ▶ **(사업주체)** S컨소시엄

- * 주요절차 통상 소요기간 : 민자 적격성 조사(12개월+α), 민간투자사업 심의(3개월), 제3자 제안공고(3개월), 실시협약 체결 등(6개월±α) 등

- 12 -

- **기재부·KDI**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 단축($\Delta 3$ 개월+ α),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·심사($\Delta 2$ 개월) 등 패스트트랙 지원
- **서울시** 공공투자 사전검토 소요기간 단축($\Delta 1$ 개월), 실시계획 신속 승인($\Delta 3$ 개월) 등 사업추진 집중 관리
- **(기대효과)** '28년까지 **약 1.1조원 기업투자** 및 독창적 디자인의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(英 런던아이의 1.5배) 건설로 방한 관광객 확대

〈참고〉 행정절차 Fast Track 주요 내용

- ① **기재부·KDI·서울시** 민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: 자료 수시 보완, 진행현황 점검, 핵심 부가쟁점 등 검토 지연소요 발생시 별도 연구용역 병행 등
- ② **기재부·KDI**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: 요건 충족시 즉시 심사
⇒ 착공 전까지 밀착관리하여,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
(민자적격성 조사, 3자공고 사전검토, 실시협약안 검토·승인 등)



2 (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)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'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사업' 조기 착공 지원

- ▶ (사업내용) 오송 K-바이오스퀘어 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캠퍼스 유치
- ▶ (투자기간) '25~'29년
- ▶ (투자규모) 약 3,193억원(국비 2,878억원, 지방비 315억원)

○ (현황) 충북은 바이오 산-학-병-연 클러스터인 '오송 K-바이오 스퀘어*' 적기 조성을 위해, 카이스트 오송캠퍼스** 유치 추진중

* 연구, 창업, 병원, 금융, 교육, 주거단지를 한 공간에 구축하여 대학의 인재 육성·공급, 기업의 일자리 제공, 병원의 연구임상 등을 집중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

** 의과학대학원, 첨단바이오·신약개발연구소 등 인재양성 및 연구 인프라 포함

- 클러스터 핵심 요소인 우수대학 입주를 신속히 추진하여 산-학-병-연 등 입주 기관 간 시너지 효과 적기 창출 필요

○ (추진방안) 과기부 R&D 에타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'카이스트 오송캠퍼스' 신속 조성 → '오송 K-바이오스퀘어' 조기 활성화

○ (기대효과) 클러스터 내 대학 캠퍼스 유치 절차를 최대한 단축 → 바이오 분야 핵심인력 양성 및 글로벌 수준 클러스터* 조기 조성

* 'K-바이오 스퀘어' 전체 조성 기간/투자 규모(안): '25~'37년 / 약 2.4조원

카이스트 오송캠퍼스 항공예상부



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감도



3 (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) 매립 타당성 검토,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의
조속 추진 및 연내 매립 기본계획 확정을 통한 사업 조기 추진 지원

- ▶ (사업내용)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5~'41년
- ▶ (투자규모) 약 20조원

○ (현황) P社は 공유수면 매립 통한 수소환원제철* 용지 조성 추진중

* 제철 공정 내 쇳물 제조시 기존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방식

- 금년 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거쳐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*
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관련 절차 단축 既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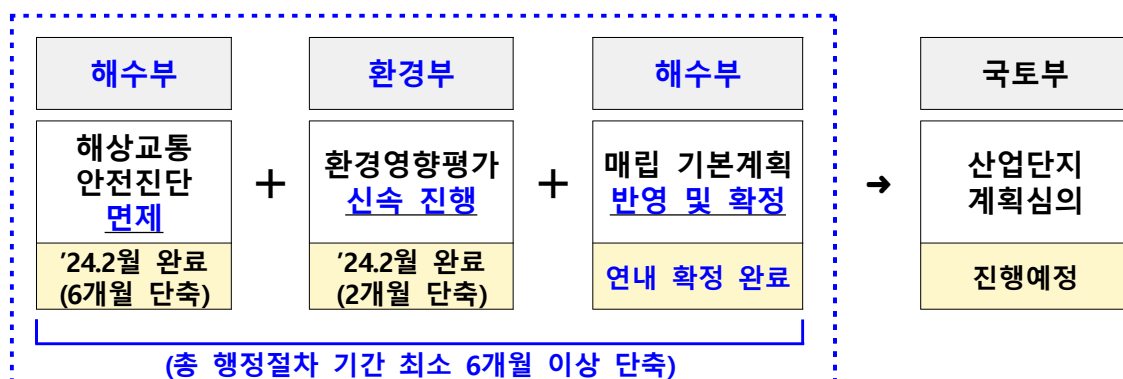
*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4조에 따르면,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직접적으로 통항하지 않는 등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 면제 가능

-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남은 절차도 신속한 추진 필요

○ (추진방안) 매립 타당성 검토,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 및
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조속히 실행하여 사업 조기* 추진 지원

* 既완료된 해상교통 안전진단 면제,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포함시 당초 대비
최소 6개월 이상 단축효과 발생

- 해수부 선행절차 완료 시 중앙연안관리 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여,
연내 매립 기본계획 확정 및 국토부 통보 추진



○ (기대효과) 인근지역 약 20조원 투자 창출(~'41) 및 친환경 제조
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탄소중립 가속화

4 (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)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(3개월 → 40일 이내)

- ▶ **(사업내용)** 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
- ▶ **(투자기간)** '24~'27년 ▶ **(투자규모)** 약 2,807억원(지방비 1,060억원)

○ **(현황)** M재단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 추진중이나, 타당성조사·투자심사 지연시 사업 차질 우려

* (타당성조사)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(행안부 지정 전문기관) → 6개월 이상 소요
(투자심사)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투자심사 → 약 3개월 소요

-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중('23.12월~)이며, 이후 투자심사 예정

○ **(추진방안)**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해 신속한 투자심사 지원

- (^{행안부}타당성조사) 타당성조사 적기 완료(~'24.7월)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·현장답사 등 조속히 이행 추진

- (^{행안부}중앙투자심사)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(약 3개월 → 40일 이내)

〈참고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·투자심사 신속 이행 관련 제도

①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(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제2항),
수시 투자심사* 활용(약 3개월 → 40일 이내,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)

* 매년 3차례 정기심사(3월, 6월, 9월) → 수시심사 활용

② 협의를 거쳐 타당성조사·투자심사 면제(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*)

* 법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사업 등(예:비경)

○ **(기대효과)** '27년까지 2,800억원 규모의 충남 지역 의료 인프라 설립 절차 신속 지원(약 3개월 → 40일 이내)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

5 (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) 지역관광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
투자자금 지원 확보 및 환경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

- ▶ **(사업내용)**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* 개발 (충주호 인근, 단양역~심곡터널(1.68km))
 * 호텔(152실) 및 어드벤처시설, 미디어아트터널 등 관광레저시설
- ▶ **(투자기간)** '24~'26년 ▶ **(사업주체)** D컨소시엄
- ▶ **(투자규모)** 약 1,100억원
- ▶ **(사업면적)** 51,842m²(호텔 6,584m²/ 어드벤처시설 6,162m²/ 미디어아트터널 9,763m² 등)

- **(현황)** D社は 단양역 폐철도부지에 호텔·어드벤처시설 등을 집적한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 중
 - 다만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, 관련 환경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상 불확실성* 상존
 - * 전략·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소요기간 장기화 우려, 수질오염 배출량 할당여부가 불확실하여 분뇨 배출시설인 호텔 등 건설에 차질
- **(추진방안)** 민간 투자자금 확보 및 환경관련 규제 신속 심사 등을 통해 '24년 하반기 착공 지원
 - ①**기재부**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 조성*, 대출 특례 보증** 등 민간 투자자 확보 애로 경감
 - * 총사업비의 20% 규모 자펀드 조성 **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특례 보증
 - ②**환경부** 전략*·소규모**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 소요기간 3개월 단축(통상 11개월 → 약 8개월)
 - *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점에서 환경 영향 및 입지 타당성 등 평가
 - **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점에 환경 영향 및 입지 타당성 등 평가
 - ③**단양군** 단양군 수질오염총량을 동 사업에 최우선 할당하여 사업 초기 환경규제 불확실성 신속 해소(단양군 오염배출 연간계획 변경)
- **(기대효과)** '26년(준공 예정)까지 약 1,100억원 기업투자 지원, 지역관광 활성화 및 단양군 체류 인구유입 확대 도모

6 (송도 K-바이오 랩허브 조성)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랩허브 건축기간 단축(△15개월) 및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

- [illegible]

- **(현황)** 바이오의약품 창업기업의 신약개발 등 성과창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·장비를 갖춘 「K-바이오 랩허브」 구축중
 - 설계적정성 검토, 총사업비 협의 등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건축기간 약 10개월 단축 추진중*
 - * 「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」, '24.2.14일
 - '25년까지 바이오 플랜트 건설, 연구소 이전 등 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집적될 예정이나, 랩허브 완공 전까지 스타트업 안착 유인 불충분
- **(추진방안)** ①「K-바이오 랩허브」 건축 기간 추가 단축 + ②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①**인천시** 설계 경제성 검토, 기술심의 등 지자체 공정 기간을 추가 단축(△5개월), 당초계획 대비 **최대 15개월 조기 완공**('29.2월 → '27.11월)
 - ②**중기부** 「K-바이오 랩허브」 완공 전에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게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 제공 + IR·네트워킹 등 지원
 - 「K-바이오 랩허브」 완공 후 입주 대상 선정 시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우대 등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속 지원
- **(기대효과)** '31년까지 **약 2,726억원 투자효과**, 송도에 바이오 혁신 생태계 선제적 조성으로 안정적 「K-바이오 랩허브」 운영 기반 마련

K-바이오 랩허브 위치도



3

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

◇ 송전선로 구축,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지원

1 (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) 산단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

- ▶ (사업내용) 광양만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 공장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18~'26년
- ▶ (투자규모) 약 3.1조원

○ (현황) 이차전지 기업 P社は 광양만 산단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나,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**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 부족***

*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총 420MW 중 250MW 부족

-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

- 또한 회선 설치시 산단 내 필수녹지 감소 문제* 해결 필요

* 「건축법」 제42조의 산단 내 필수녹지면적 의무조성 비율 충족 곤란

○ (추진방안) ①기업전용 회선 설치 근거 마련, ②유휴부지의 대체녹지 활용 등을 통해 P社가 사용가능한 회선 설치

- ①한전 기업전용 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'한전 사업소 규정' 개정*(24.3월)

* 산단공급 전력에 한해서 여건이 되는 경우 추가회선 설치 가능 규정 신설

- ②광양경자청 회선설치 되는 필수녹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녹지 추가지정(~'25.上)

○ (기대효과) 약 3.1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구축 가동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

광양만 산단 조감도



P社 이차전지 공장 조감도



② (울산 장생포선(線) 부지 활용 공장 증설) 현재 운행이 중단된 철도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 허용(10여개 기업)

- ▶ (사업내용) 울산·미포 국가산단 내 운행중지 철도(장생포선(線)) 부지 활용 공장부지 확보
- ▶ (투자기간) '24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2,400억원+α

○ (현황) B社は 울산·미포 국가산단 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 화성공장 증설(공장 4기 → 6기)* 추진중

* 투자규모 : 약 2,400억원 / 투자면적 : 6,850m²

- 그러나, 장기간 열차운행이 중단('18.1월~)된 울산 장생포선(線) 철도가 해당 지역을 횡단하고 있어 부지활용이 어려운 상황

〈참고〉 울산 장생포선(線) 철도노선 현황

- 당초 S社の 물류운송을 위해 운영되었으나, 도로망 개선 등으로 효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'18.1월부터 운영 중단
- 이후 전체 노선(3.3km) 중 S社 전용철도(1.4km) 구간이 용도폐지 후 철거되었으나, 잔여 철도구간(1.9km)은 미활용되고 있는 상황
- * 잔여 철도구간(1.9km) 부지 : 국유재산(국토부), 공유재산(울산시) 등

- 한편, B社 외 인근 10여개 기업들도 해당 미운영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공장 증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

○ (추진방안) 국토부 철도노선 폐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('24.上)하고, 노선폐지 후 즉시 용도폐지 등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('24.下)

- 국토부의 용도폐지 이후 국토부·울산시가 기업에게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공장증설 투자 착공 지원

○ (기대효과) 해당 기업 공장증설에 따른 2,400억 투자효과 + 인근 10여개 기업들의 해당 부지를 활용한 추가 투자 예상

3 (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) 송전선로 설치경로 우회,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적기 준공으로 산단 내 전력 적기 공급

- ▶ (사업내용) 이차전지 부품·장비 등 생산공장이 다수 입지한 이차전지 산단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3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9.9조원

○ (현황)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('23.7월) 되어 다수 이차전지 기업입주 예정으로 전력수요 크게 증가*할 전망

* '24년 211MW → '26년 약 971MW

- 한전은 산단내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준공을 '26.10월까지 추진하기로 결정('20.4월)

- 그러나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현재 선로 통과구역 협의가 불발*되어 대안경로를 검토할 필요

*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지하 매설물 설치 불가한 경우가 많고, 새만금 남북대로는 최근 도로포장을 마쳐 재포장 금지기간에 해당

○ (추진방안) 한전·도로관리청 간 협의 통해 군산을 우회하는 형태로 송전선로 경로 결정 신속 추진 → 산단 내 전력 적기 공급

- 한전 시공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이 용이한 곳으로 선로 통과구역을 정하기 위한 지반조사 등 추진('24.3월~)

- 군산시 아울러, 해당 녹지 소재지인 군산시의 신속한 도로점용 인허가 등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('24.5월~)

○ (기대효과) 새만금 산단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'27년까지 약 9.9조원 투자효과 기대

4 (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) 既단축일정 적기이행 및 포항시 행정절차 4개월 단축으로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

- ▶ (사업내용) 니켈·전구체, 양극재,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거점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4~'30년
- ▶ (투자 규모) 약 4.1조원

- (현황) 영일만 산단은 이차전지 기업 집적에 따라 '27년까지 약 180MW, '30년까지 약 470MW의 추가 전력공급 요청
 - 청하 변전소(154kV)와 영일만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(약 13km)는 '28.10월 준공 예정*이나, 신속한 공장 신·증설을 위해 추가 단축 필요
 - *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('23.5월)에 표준공기 대비 1년 이상 단축하여 既반영
- (추진방안)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부·지자체·한전간 협업을 바탕으로 행정절차 등 단축 추진*
 - * 既 발표일정('28.10월)에 한전의 단축공정 적용이 반영된 상태로, 추가단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·허가 행정처리기간 단축 필요
 - (산업부·한전) 既단축일정('28.10월)의 적기 이행 및 추가 단축 추진(한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조기 신청 → 산업부 승인 기간 최소화)
 - (포항시) 적극적 주민 설득을 통한 수용성 제고 및 신고·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*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 협조
 - * 도시계획시설 결정, 산지·농지 등 개발행위 허가, 도로 점용허가, 공사계획·굴착행위 신고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 추진으로 30개월 → 26개월까지 단축 가능
- (기대효과)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·투자(4.1조원 규모) 기대

5 (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) 우수 인재 주거시설 공급 등 구미 산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지원

- ▶ (사업내용)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(오피스텔+근린생활시설)
- ▶ (사업기간) '24~'27년 ▶ (사업규모) 약 1,200억원

- (현황) 구미 1국가산단은 40년 이상된 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주거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
 - 특히, 산단 내 주거시설 대부분이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(66㎡~100㎡) 위주여서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1인 전용 주거시설이 부족
- (추진방안) ^{기재부}지역활성화 투자 펀드'를 활용하여 청년 근로자를 위한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마련('24.下 착공)
 - 경상북도·구미시 근로자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 대기업·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역할을 지속 수행
 -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
 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저리 정책자금도 활용하여 사업성 보장
- (기대효과) 약 1,200억원 규모 투자 지원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안정화하고 주변 개발수요 제고

구미 국가산단 주거시설 현재모습



구미 국가산단 임대주택 조감도



V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1 투자 관련 규제 개선

추진 과제	소관부처·지자체	추진일정
①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		
•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	제주도	~'24.上
•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산단 지정계획 반영 요청	산업부	~'24.下
• 산단 지정계획 반영	국토부	~'24.下
②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		
• 환경보전방안 적정성 검토	금강유역 환경청	~'24.6.
•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통한 산단 입주 허용	청주시	~'24.10.
③ 울산 페플라스틱 재활용공장 구축 · ④ S社 서산3공장(이차전지) 구축		
•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근거 마련 (「산업집적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)	산업부	~'24.6.
•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단 입주 허용	산업부	'24.下
⑤ 대전 나노·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· ⑥ 대전 탑림·전민 국가산단 조성		
•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비율 확대 (「지방공사채 발행·운영기준」 개정·시행)	행안부	'24.3.
⑦ 셀프스토리지 기반 조성		
• 건축물 용도 명확화를 위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	국토부	'24.上~

2

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

추진 과제	소관부처·지자체	추진일정
①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		
•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지원	기재부·KDI	'24.3.~
• 사전검토 기간 단축 및 실시계획 신속 승인 등	서울시	~'26.上.
②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		
• 관련 행정절차 신속 추진	과기부 등	'24.上~
③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		
•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신속 개최	해수부	~'24.下
• 매립 기본계획 확정 및 국토부 통보	해수부	~'24.
④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		
• 타당성조사 위한 자료조사·현장답사 신속 이행	행안부	~'24.7.
• 수시 투자심사 실시	행안부	'24.7.~
⑤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		
•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자펀드 조성	기재부	'24.上~
• 전략·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	환경부	~'24.10.
•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	단양군	~'24.10.
⑥ 송도 K-바이오랩허브 조성		
• 설계 경제성 검토, 기술심의 등 공정기간 단축	인천시	~'27.11.
• 입주 희망 바이오 스타트업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	중기부	'25.~

3

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

추진 과제	소관부처·지자체	추진일정
①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		
• 사업소 규정 개정	한전	'24.3.
• 유휴부지의 대체녹지 확보 추진	광양경자청	~'25.上
② 울산 장생포선(線) 부지 활용 공장 증설		
• 노선폐지 절차 진행	국토부	'24.上~
• 용도폐지 절차 진행	국토부	~'24.下
• 기업에게 부지 매각	국토부·울산시	'25.~
③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		
• 시공기간 최소화를 위한 지반조사 등 추진	한전	'24.3.~
• 신속한 인허가 추진	군산시	'24.5.~
④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		
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조기신청 및 승인기간 최소화	산업부·한전	'24.6.~
• 인허가 신속 추진하여 조기 준공	포항시·한전	~'28.上.
⑤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		
• 지역활성화 투자 자펀드 조성 등	기재부	'24.上~